
정책참고자료

2018-1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4
-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229건 지적 -	

2 국민권익위원회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9
-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현장목소리 반영, 창업지원사업 편리해진다.	10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4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3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19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22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5조 8,309억 원 편성, 올해보다 10.9% 증가 -	

7 농림축산식품부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국회 통과	25
- 어린이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 비만예방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8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 점검..위반 1,781곳 드러나	27
-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원인 -	

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32
---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36
-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개선 -	

11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38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한국형 출폐라인 탄광재생(강원도 태백시) 등 뉴딜사업 본격 추진 -	

12 해양수산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47
-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적발하여 검찰 송치 -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229건 지적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사항>

- (서울 대치초) 차량 과속 및 신호 위반 빈번 →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보행대기 공간 부족 → 보도 연장 설치
- (인천 청라초)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미지정 →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지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인성 저하 →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강원 청운초) 고원식 횡단보도 비규격 → 고원식 횡단보도 재설치
보호구역 노면표시 퇴색 → 노면표시 재도색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점검은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전국 36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실시하였다.

□ 합동 점검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단위 : 건)>

구분	계	안전 표지	노면 표시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교차로	시선유도봉 반사경	신호등 조명시설	방호 울타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시인성	정류장	과속	불법 주정차	교차로 구조	기타
건수	229	21	63	9	21	12	20	4	5	7	3	1	17	21	7	18

← 안전시설 미비 162건(71%) →

- 우선,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반면,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개선필요 사례〉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속도저감시설



□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 보호구역 인지성 확보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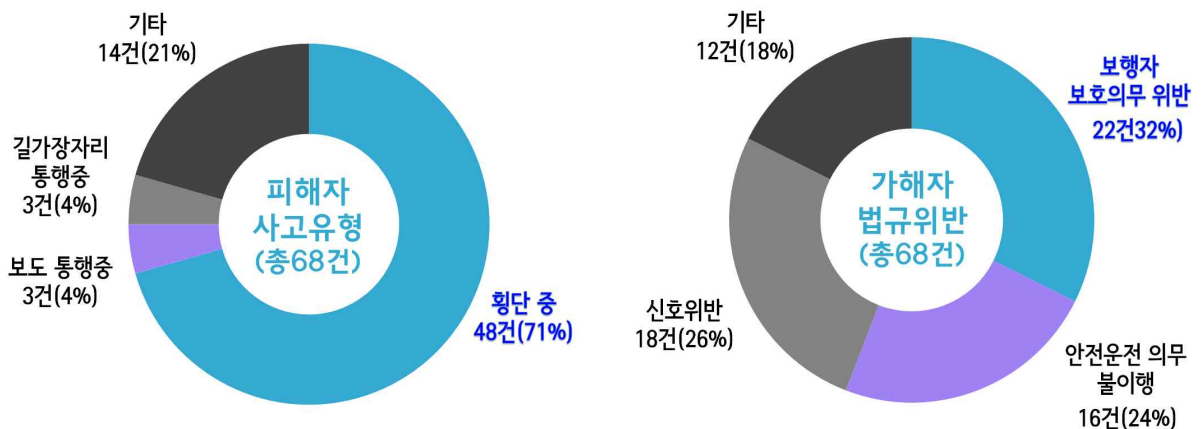
□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분석대상)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68건
- (피해자 사고유형) 횡단 중 사고가 48건(71%)으로 가장 많이 발생
- (가해자 법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2%)*, 신호위반(26%),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4%)** 순으로 나타남.

*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 운전자 부주의 혹은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예) 휴대전화·DMB 시청, 운전미숙, 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 등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

-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현장목소리 반영, 창업지원사업 편리해진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지침 적용 사업 현황(12개)>

사업명	'18년 예산(억원)	사업명	'18년 예산(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1,013	선도벤처연계	76
창업선도대학	895	1인창조기업	100
스마트벤처캠퍼스	124	민관협력창업자육성	536
시니어창업지원	214	사내벤처육성	100
창업도약패키지	800	스마트창작터	90
글로벌엑셀러레이팅	72	제도전성공패키지	150

-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되었다.

* 창업벤처혁신실장 주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6개 지역 개최(6.25~7.27)

-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하였다.
-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하였다.
- 기술보호와 여성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에 맞춰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를 도입하였으며,
-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하였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 가능

-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면서,
-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목 적

- 창업기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 수행 기업 부담완화 및 편의성 제고, 최근 대내외 정책 변화 반영 및 제도 체계화

□ 주요 개정 내용

① 창업기업 부담완화 및 편의성 제고, 책임성 강화

-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제39조)

기존	재료비 : 견적서(비교견적포함) + 거래명세서 (이하 생략) 기계장치 : 견적서(비교견적포함) + 거래명세서 (이하 생략) 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 보고서
변경	재료비 : <u>견적서</u> 기계장치 : <u>견적서</u> 여비 : <u>국내여비(실집행 영수증)</u> 기타(신설) : <u>비교견적서(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만 제출 필요)</u>

- 기업경영성과조사 증빙서류 제출 제한(제59조)

신설	주관기관은 매출액, 고용현황, 수출실적 등 기업경영 성과 등을 조사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성과에 대한 증빙서류는 협약기간 내 1회만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성실실패 도입(제24조)

기존	창업기업의 성과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실패'로 구분한다.					
변경	<u>평가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성실실패'/'실패'로 구분한다.</u> <u>단, '성실실패'의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u>					
	* (붙임 제1호) 창업기업 제재 조항 <table><tr><th>구분</th><th>제재 및 환수 사유</th><th>제재 및 환수기준</th></tr><tr><td>성실실패 (신설)</td><td>☐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td><td>잔액 환수</td></tr></table>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성실실패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성실실패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				

○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강화(제38조)

기존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변경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은 일정부분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책 변화 내용 반영 및 운영 제도 체계화

○ 기술보호노력 및 비밀보호계획(제17조)

신설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 및 비밀보호 계획 등을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

○ 여성 창업기업 창업촉진(제70조)

신설

- ①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활성화 촉진을 위해 여성 창업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성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사업비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붙임 제2호) 주관기관 제재 조항(신설)

제재등급	기 준	제제 및 환수기준
경 고	○ 사업 운영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성에 따른 차별하는 경우	성과평가지 감점 (건당 - 3점)

○ 사업비 정산 원칙(제52조)

신설	사업 협약체결 및 집행기간을 24개월 이내로 운영하며, 협약종료 후 6개월 이내 결산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이의제기 심의 절차(제12조)

신설	이의제기 심의의 경우 해당 처분 및 심사에 참여한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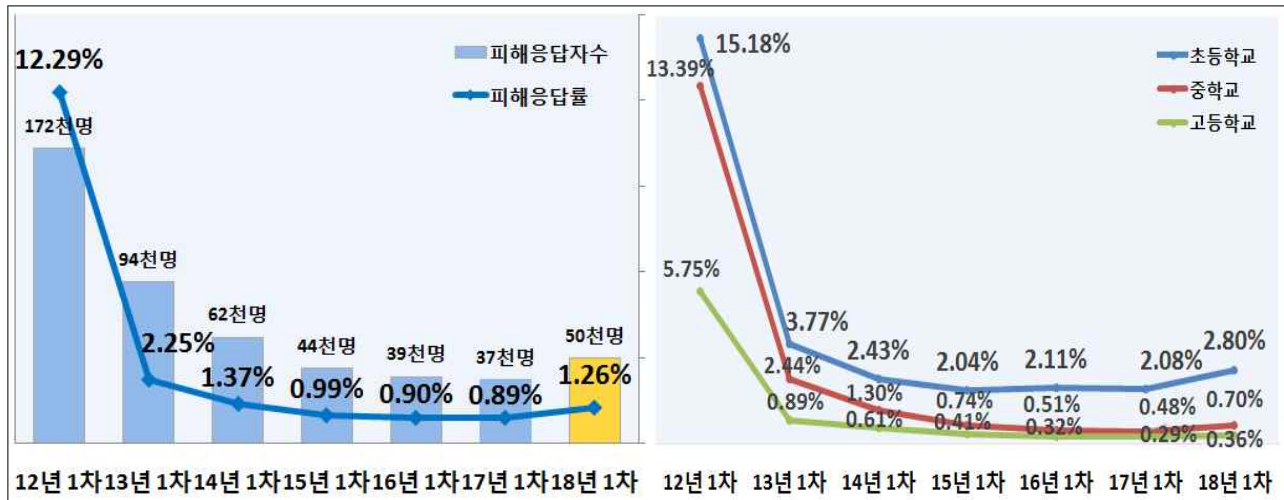
-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기간/대상) '18.5.1.(화)~5.31.(목)(온라인 조사) / 초4~고3 재학생 중 399만 명(93.5%) 참여
- (조사내용) '17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 (공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11월말 공시) 홈페이지

-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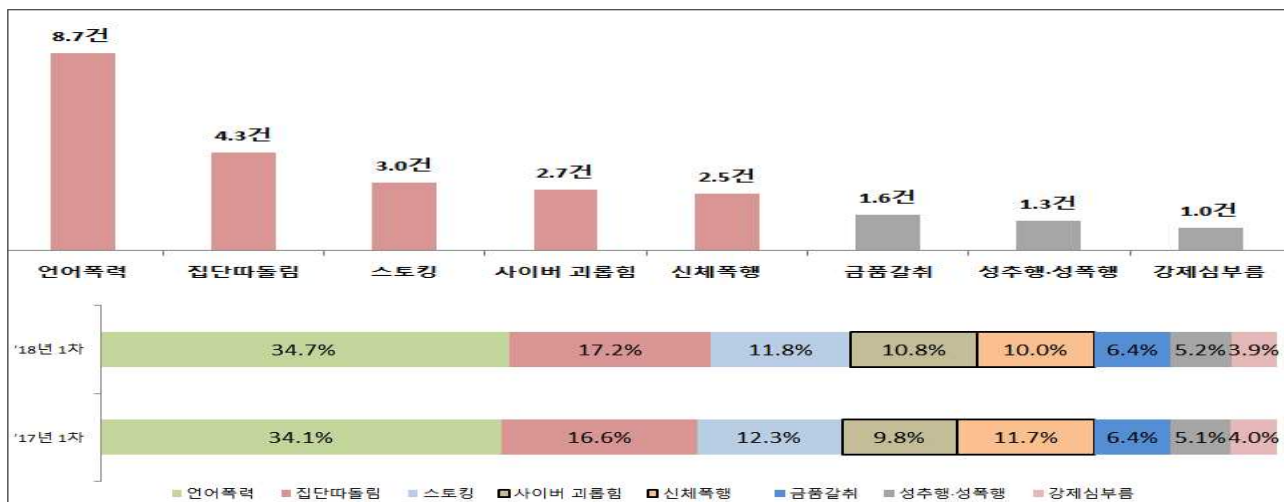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

① 피해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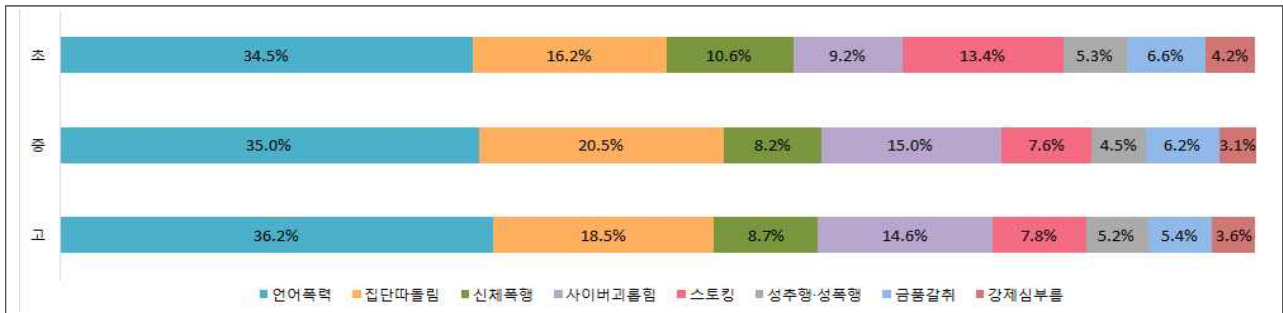
- 피해응답률은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 0.7%p, 0.2%p, 0.1%p 증가하였다.



-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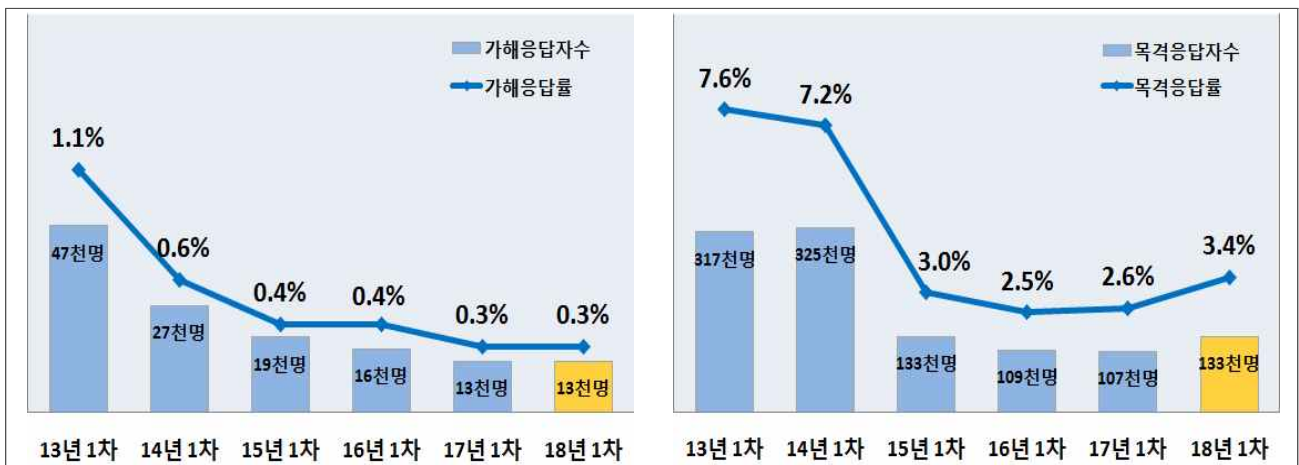


-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p 높았다.



②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 가해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지난해 1차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목격 응답률은 3.4%(13만3천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8%p 증가했다.



③ 학교폭력 인식 관련 응답현황

-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가족 44.5%, 선생님 19.3% 등의 순)로 21%p 증가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피해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도움 비율은 68.2%이고 '모른 척 했다'의 방관 응답은 30.5%로 10.2%p 증가하여, 가·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대구의 경우 '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붙임3)의 하나인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여, 지난 5년간 피해응답률(1차)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는 효과를 보았다.

※ 대구 피해응답률(1차) 추이: ('14) 0.5% →('15) 0.3% →('16) 0.2% →('17) 0.2%→('18) 0.3%

□ 한편 2017학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중학교(15,576건), 고등학교(9,258건), 초등학교(6,159건) 순이었으며,
- '17학년도 심의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 50.5%, 중학교 32.3%, 고등학교 21.8%로 나타났다.

기간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율(%)
'15학년도 ('15.3.1~'16.2.29)	초	3,239
	중	10,585
	고	6,006
	계	19,830
'16학년도 ('16.3.1~'17.2.29)	초	4,092
	중	11,775
	고	7,599
	계	23,466
'17학년도 ('17.3.1~'18.2.29)	초	6,159
	중	15,576
	고	9,258
	계	30,993

※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초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한 건수이며, 학기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단순 비교는 어려움

□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개편·보완 계획(안)

- 이번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주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한 초등용 문항을 분리 적용하고, 조사 기간을 더 길게 조정하였다.
- 이는 작년 말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의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완한 부분이다.

※ 기간 : '16년 10월부터 조사시점(약 7개월) → '17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약 9개월)

※ 학생 본인 응답결과 최종 확인 후 제출기능 추가를 통한 응답결과 신뢰성 강화

○ 또한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보완할 예정이다.

- 1차 전수조사는 전체적 학교폭력 실태 및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보완하고,

- 2차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에서 심층 조사인 표본조사로 개편, 학교 폭력 발생원인을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 연구 등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종단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인과관계 및 개인·환경요인 등을 시계열 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하여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조명한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8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조사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개편·보완하여 학교폭력 실태·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과학기술 관련 16개 기관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12일(수)까지 개최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개요>

- 기 간 : (과기특성화대, 과학기술출연연 분과) '18. 8. 6(월) ~ 9. 12(수)
(과학교육 및 문화, 연구산업 분과) '18. 8. 13(월) ~ 9. 12(수)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KAIST, GIST, DGIST, UNIST, 한국연구재단, UST, KI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한국기술사회, 국립연구안전관리본부
- 포 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최우수 1팀 300만원, 우수 2팀 각 200만원 등)

-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 관련기관의 협동조합 창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인이 함께 협업하는 아이디어”, “과학기술 공공행정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창업 아이디어” 이다.
- 공모전은 ①과기특성화대 분과, ②과학기술 출연(연) 분과, ③과학교육 및 문화 분과, ④연구산업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본선 : 과기정통부

분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분과	과학기술 출연연 분과	과학교육 및 문화 분과	연구산업 분과
기관	KAIST, GIST, DGIST, UNIST, 한국연구재단	UST, KIST, NST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한국기술사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분야 (예시)	대학 기술사업화, 청년 창업 등	출연(연) 기술사업화, 고경력 창업 등	과학교육과 문화 산업	주문연구, 연구관리, 기술사, 연구안전 등
신청 자격	과기특성화대 구성원 등	과기출연(연) 구성원	주관기관 구성원 및 모든 국민	연구산업 관련 관심있는 모든 국민

○ 분과별로 우수 아이디어 3팀을 선정하여 본선에 진출한 총12팀에게는 상금을 지급하고 이 중 우수팀 3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협동조합 사업모델(BM), 사업화, 기술 컨설팅, 선배협동조합 연계지원 등

□ 더불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협동조합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설명회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8.21, 화) 및 대전 한국연구재단(8.23, 목)에서 개최한다.

※ <붙임2> 참조

□ 과기정통부 강병삼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협동조합을 과학기술 신산업 주체이자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주요내용

- (추진목적) 과학기술 혁신주체(출연(연), 과학특성화대학 등)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
- (추진내용) 과기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거나, 설립 및 운영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팀·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선정·포상

※ 각 기관을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추진, 분과별 우수팀을 대상으로 본선 시상 추진

<“과기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예시>

- ☞ (과학기술 전문성 기반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참여기관 재직중 또는 재직경험이 있는 자가 기관의 자원과 기반을 활용하는 융복합형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 ☞ (과학기술현장에서 파생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는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기술 기반으로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등 기술이 필요한 민간에게 보급하는 사업 아이디어

□ 참여기관

- (과기특성화대 분과) KAIST, GIST, DGIST, UNIST, 한국연구재단
- (과기출연연 분과) UST, KIST, NST
- (과학교육 및 문화 분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 (연구산업 분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한국기술사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추진 절차

- 각 기관별 공모 및 접수(8.6 또는 8.13 ~ 9.12, 5주)
- 분과별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9.17 ~ 10.5)
- 분과별 우수팀 발표(10.11, 분과별 포상 10팀, 본선 진출 3팀)
- 본선심사 및 우수팀 발표 및 포상(10월말, 전체 12팀 포상 및 3개팀 장관상)

□ 선정팀 혜택

- 분과별 우수팀 발표 및 포상
- 본선리그 최우수팀 및 우수팀은 상금 및 장관상(총 3점) 수상

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5조 8,309억 원 편성,
올해보다 10.9% 증가 -

8월 28일 (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 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 통합문화이용권(951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0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8,041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10.1%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한다.

체육 부문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및 장애인형 포함)(1,880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394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21.5%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은 ▲ 근로자 휴가지원(105억 원), ▲ 열린 관광 환경조성(40억 원), ▲ 지역관광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25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302억 원이 편성되어, 체육 부문과 비슷한 비중(24.5%)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750억 원), ▲ 생활밀착형 문화 자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26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8% 증가한 8,270억 원이 편성되었다.

< 2019년 문체부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18년 예산(본예산)		'19년 정부안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합 계	52,578	100.0	58,309	100.0	5,731	10.9
문화예술	16,387	31.2	18,041	30.9	1,654	10.1
체 육	11,850	22.5	14,394	24.7	2,544	21.5
관 광	14,021	26.7	14,302	24.5	281	2.0
콘텐츠	7,140	13.6	8,270	14.2	1,130	15.8
기 타	3,180	6.0	3,302	5.7	122	3.8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초 최종 확정되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점투자 분야] 국민 삶의 질 높이는 4대 전략과제 마련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총 4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여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①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여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③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④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문
체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중점과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1,0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378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819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2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
②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원(30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951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창출 (12.5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40억 원) 등
③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0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6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81억 원), ▲게임스쿨(G-스쿨) 운영(25억 원) 등
④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59억 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44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20억 원), ▲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구축(13억 원),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12억 원),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8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5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제도전 프로그램(80억 원) 등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국회 통과

- 어린이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
비만예방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주 요 내 용 》

◆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교재 개발, (추가)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사유) 어린이가 건전한 식습관을 갖게 하는 등 국민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와 미래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으며, 내달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 맞벌이가정 등 간식을 챙겨주기 어려운 여건의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 제공

○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 (공급체계) 충북원협APC(사과·배) → 가공업체(충북 옥천) → 충북도내 초등학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이다.
-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인 1,588곳으로 나타났다.
 - * 도료 및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 '17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 (개소) >

합계	중금속기준 초과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기타
1,781	1,588	115	38	33	7

* 기타: 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등

-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2. 질의응답.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개요

- '09.3월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어린이 사용교실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 도료·마감재, 바닥재, 목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준수 의무 부여

□ 지도점검 결과

- 11만 여개 대상 시설 중 12,234개소를 선정,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1,781개소(14.6%)가 기준 초과

- 시설별 기준 초과율은 어린이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며, 대부분 도료·마감재 중금속 기준을 초과

* '16년도 기준 초과율은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실시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시설	기준초과 시설 수			
		계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목재 방부재사용	기타 (모래, 바닥재 기준 등)
계	12,234	1,781	1,588	38	155
어린이집	2,913	493	493	-	-
유치원	1,458	330	328	-	2
초등학교	1,338	364	361	-	3
특수학교	38	8	8	-	-
놀이시설	6,487	586	398	38	150

1.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됨

2.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료,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16조 [별표2]에 규정

구분		관리 기준
도료 및 마감재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납 : 600mg/kg 이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목재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③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④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바닥재	토양	· 납 : 200mg/kg 이하 · 카드뮴 : 4mg/kg 이하 · 비소 : 25mg/kg 이하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6가크롬 : 5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합성 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기는?

- ‘환경보건법’ 개정(’12.2)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됨

4. 지도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처분은?

-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최대 6개월),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한다.
 - 일터에서는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 예산 등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사망사고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는 증가세를 보여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0년간 지역별 사망재해 통계와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에 초점을 두게 되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개한다.
 -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의 경우, 최근 가스 누출과 화재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전개한다.
 - 9~10월 화학공장 정기 보수기간을 맞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설비 보수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한 기술지도와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형건물과 타워주차장이 밀집한 서울지역의 경우, 승강기와 주차설비 유지·보수 중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개한다.

-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안전작업절차 수립 지원과 주차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지게차 불량 작업,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정비·보수 작업 간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지역별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한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다.” 며,

- “이번 지역 맞춤형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 주요내용

기관	취약분야	주요추진내용
서울본부	주차설비	▶ 주차설비·승강기 제작·유지보수 사업장 기술지도(100개소)
강원동부	수산물식품제조 기계기구·비금속	▶ 3대 위험업종* 사망사고예방 기술지도(31개소)
부산본부	비정형작업 조선업	▶ 1사1규범 갖기 및 2핵심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 전개 * ① 중량물 취급작업, ② 정비·수리 중 운전정지 ▶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테마별 기술지도(135개소) ▶ 부산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 개최(8월, 11월)
경남동부	위험업종	▶ 위험업종 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500개소, 고용부합동) ▶ 사고다발 2개 업종 사업주 대상 특별교육 실시(고용부 합동)
울산	PSM 사업장, 00중공업 하청	▶ PSM 대상 사업장 하청업체 기술지도(150개소) ▶ 00중공업 하청업체 위험성평가 인정 유도(70개소)
광주본부	비정형작업 3대 기인물 * 지게차, 롤러기, 리프트	▶ 비정형작업 사고재해(2건이상) 발생사업장 집중지도(65개소) ▶ 3대 기인물 안전조치 미흡사업장 기술지도(수시) ▶ 고용부-유관기관-대기업-공단 협업강화 * 불량사업장 지도 강화(대기업은 협력업체) ▶ 지역본부장, 기술지원국장 현장경영(4개소)
전남동부	국가산단 협력업체	▶ 대정비 보수작업 단계별 사망사고 집중관리*(수시) * 작업계획서 제출→계획서 심사→특별교육→정비보수기간중 점검(고용부 합동)→시정조치 및 모니터링 ▶ 광양 국가산단 산재사망 줄이기 CEO 세미나(100명) ▶ 지역내 고위험사업장 집중지도(114개소)
전북	수송용기계 식료품	▶ 완주·정읍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집중관리(35개소) ▶ 식료품 중상해 끼임재해 예방 기술지도(28개소)
전북서부	비금속업종	▶ 고위험관리 밀착관리 사업장 집중지도(32개소) ▶ 비금속 업종 기본법규 지키기 지도(78개소)
전남	조선업	▶ 2대 조선업체(00중공업, 00조선) 집중관리
제주	지게차 식료품제조업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보유사업장 고용부 합동 점검(10개소) ▶ 식료품 협의체(12개소)을 통한 1사 1규범 실천문화 조성
중부본부	3대 기인물 * 지게차, 크레인, 리프트	▶ 산재사망사고 다발 3대 기인물 집중지도(250개소)
경기	중상해 상위 5대 업종	▶ 중상해사고 발생 위험사업장 집중관리(342개소) ▶ 사고다발 특정지역 사업주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기북부	리프트, 비정형작업	▶ 리프트 보유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 기술지도(289개소) ▶ 재해취약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 기술지도(61개소)
경기서부	3대 기인물 * 지게차, 크레인,	▶ 안전관리 수준향상 실시간 지원(185개소)

기관	취약분야	주요 추진 내용
	리프트	
경기 동부	끼임, 일반동력기계	▶ 일반 동력기계 끼임 사망사고 예방 집중지도(150개소)
경기 중부	플라스틱제 조업 건설용금속제조업	▶ 사망사고 다발 상위 업종 기술지원(200개소) ▶ 사고다발 2개 업종 사업주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구 본부	위험기계기구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핵심추진과제별 교육 운영(35회, 2,715명) ▶ 하절기 정비·보수작업 사망사고 예방 기술지도(87개소) ▶ 기관장 현장경영(주1회 이상)
대구 서부	끼임 및 중량물 취급작업	▶ 끼임 사망재해 예방 맞춤형 기술지원(300개소) ▶ 중량물 취급 안전을 위한 기술지도(120개소)
경북 동부	철강업종	▶ 철강업종 정비보수공사 밀착관리(20회) ▶ 사망재해 고위험업종(작업) 기술지도(150개소)
경북	100인이상 사업장	▶ 대기업 사업장 합동점검(6개소) 및 방문교육(22개소) ▶ 고위험 사업장 사망사고예방 기술지도(120개소) ▶ 안전관리 전문기관 실무자 간담회(2회) ▶ 사업장 밀집 농공단지 중심으로 캠페인 전개(1,000개소)
대전 본부	화재·폭발 및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서산지역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집중지도(88개소) ▶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집중관리(86개소)
충북	음성·진천지역	▶ 음성·진천지역 사망사고 위험 2대 업종* 집중관리(850개소) *기계기구·비금속, 화학제품
충남	비정형 작업	▶ 대규모 보수작업(Shut-Down)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108개소) - 주요 철강업종 대상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개선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개정사항

□ 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완화(별표 3 제1호가목3)마))

개정전	개정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u>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u>

□ 시행일 : 2018. 8. 3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한국형 출페라인
탄광재생(강원도 태백시) 등 뉴딜사업 본격 추진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 : 강석구 충남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병준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위원** :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림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화재청 차장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 곳을 선정했습니다.

-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년도 선정 중점사항 》

-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습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습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17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18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협업),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금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선정사업 내용 》

-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합니다.
 -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출폐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 1847년 건설된 독일 출폐라인 탄광단지는 1980년대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문화 생산 도시로 탈바꿈
- 또한,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강원도 삼척시는 미사용 모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노후청사인 신평1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임대상가 조성(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

○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충북 제천(우리동네살리기), 경북 포항(경제기반형),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Wi-Fi망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대전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는 과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했던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기존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

-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추진절차) 선도지역 지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 활성화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내 사업착공

-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고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구분	선정	신청·제안	사업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시군구	읍면동		
서울 (7)	시도	중랑구	중랑구	목2동	일반근린형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서대문구	서대문구	천연동	일반근린형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강북구	강북구	수유1동	주거지지원형	함께사는 수유1동
		은평구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관악구	관악구	난곡동	주거지지원형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기동	우리동네살리기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금천구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부산 (7)	정부	부산도시 공	금정구	금사동	주거지지원형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동래구	동래구	온천1동	중심시가지형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시도	해운대구	해운대구	반송2동	일반근린형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사하구	사하구	신평1동	일반근린형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중구	중구	영주동	주거지지원형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연제구	연제구	거제동	주거지지원형	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 마을
		서구	서구	동대신2동	우리동네살리기	덕발골, 새바람
대구 (7)	정부	LD	북구	산격동	중심시가지형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대구도시 공	북구	북현1동	우리동네살리기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중구	중구	포정동	중심시가지형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시도	중구	중구	동산동	일반근린형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달서구	달서구	죽전동	일반근린형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서구	서구	비산동	주거지지원형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
		남구	남구	이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인천 (5)	정부	서구	서구	석남동	중심시가지형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중구	신흥동	주거지지원형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시도	계양구	계양구	효성1동	주거지지원형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주거지지원형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우리동네살리기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광주 (5)	정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경제기반형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북구	북구	중흥2동	중심시가지형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시도	동구	동구	동명동	주거지지원형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서구	서구	농성동	주거지지원형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남구	남구	사직동	주거지지원형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대전 (3)	시도	대덕구	대덕구	오정동	일반근린형	"복적복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서구	서구	도마동	주거지지원형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동구	동구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하늘은 담은 행복 예술촌 ... 골목이 주는 위로
울산 (4)	정부	울산도시 공 (단위사업)	남구	옥동	우리동네살리기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동구	동구	서부동	일반근린형	도심속 생활문화의 커, 골목으로 이어지다
	시도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일반근린형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중구	중구	병영2동	우리동네살리 기	깨어나라! 성곽도시
세종 (2)	정부	LH/한전	세종시	조치원읍	일반근린형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시도	세종특별 시	세종시	전의면	일반근린형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경기 (9)	정부	LH	고양시	일산동	일반근린형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경기도시 공	시흥시	신천동	일반근린형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LH	안양시	석수2동	주거지지원형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시도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일반근린형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
		안산시	안산시	월피동	일반근린형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하나되어 흐르다
		광주시	광주시	경안동	일반근린형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고양시	고양시	삼송동	주거지지원형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화성시	화성시	화산동	주거지지원형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樂)서(書)마을
		시흥시	시흥시	대야동	우리동네살리 기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강원 (7)	정부	광해관리 공단	태백시	장성동	경제기반형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LH	철원군	철원읍	주거지지원형	평화지역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花地)마을, 지화(地花)자"
	시도	삼척시	삼척시	정라동	중심시가지형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원주시	원주시	학성동	일반근린형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삼척시	삼척시	성내동	일반근린형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주거지지원형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충북 (4)	시도	정선군	정선군	사북읍	우리동네살리 기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충주시	충주시	문화동	일반근린형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多)세대를 잇다
		청주시	청주시	내덕1동	주거지지원형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주거지지원형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충남 (6)	정부	LH	아산시	온양1동	일반근린형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보령시	보령시	대천동	중심시가지형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시도	논산시	논산시	화지동	일반근린형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
		당진시	당진시	읍내동	일반근린형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주거지지원형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우리동네살리 기	꿈을 찾는 새봄동지, 남문동마을
전북 (7)	정부	LH	정읍시	수성동	중심시가지형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전주시	전주시	우아동3 가	중심시가지형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김제시	김제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 "세계축제도시 김제"
	시도	남원시	남원시	동충동	일반근린형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일반근린형	부안 매화풍류마을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주거지지원형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전남 (8)	정부	전주시	전주시	서완산동 1가	우리동네살리 기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
		LH	나주시	금남동	중심시가지형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LH	여수시	문수동	주거지지원형	스마트하게 通通通 문수동
	시도	광양시	광양시	광영동	중심시가지형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나주시	나주시	영산동	일반근린형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일반근린형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시도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일반근린형	강진읍 위대한 유산
		광양시	광양시	태인동	주거지지원형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보성군	보성군	별 교 읍	우리동네살리 기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경북 (8)	정부	포항시	포항시	송도동	경제기반형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경주시	경주시	황오동	중심시가지형	이천년 고도(古鄣) 경주의 부활
		구미시	구미시	원평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시도	영천시	영천시	완산동	일반근린형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경산시	경산시	서상동	일반근린형	서상길 청년뉴딜문화마을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일반근린형	"마늘을 사랑한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일반근린형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들] 성주
		포항시	포항시	신흥동	우리동네살리 기	함께 가꾸는 삶터,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경남 (8)	정부	한국관광 공 (기획안)	남해군	남해읍	중심시가지형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창원시	창원시	대흥동	중심시가지형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갖다
		김해시	김해시	삼안동	중심시가지형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시도	창원시	창원시	구암동	일반근린형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일반근린형	빛·물·바람·흙 함양 향노화 싹틔우기
		통영시	통영시	정량동	주거지지원형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사천시	사천시	대방동	주거지지원형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荒 굴항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우리동네살리 기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근린형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제주 (2)	시도	제주시	제주시	삼도2동	주거지지원형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적발하여 검찰 송치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 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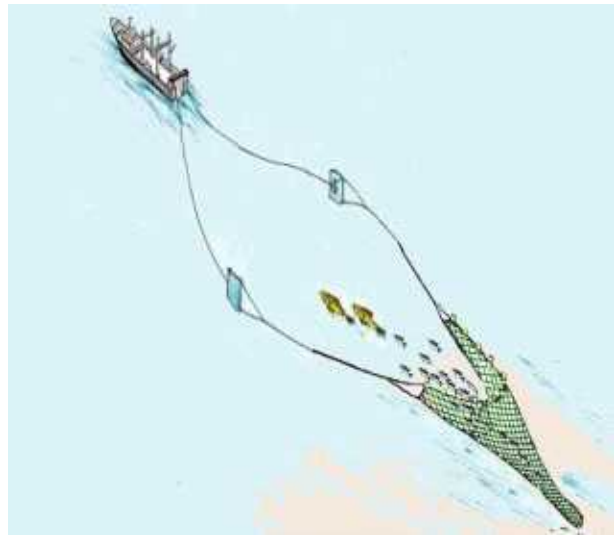
* 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 어선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 어구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적발하였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형기선저인망 모식도



소형기선저인망 조업 사진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



단속공무원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도주하고 있는 불법어선



승선 방지용 천막 전개



단속공무원 승선조사를 방해하며
전속으로 도주하는 불법어선